

‘서울대 10개 만들기’ 구체화... 거점대 3000억 집중 투자

교육부, 지역인재 양성방안 발표 연내 거점국립대 3곳 선정·지원 성과 중심 대학구조 혁신 추진

국정과제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구상이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거점국립대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내세웠던 기존 구상과 달리, 3곳을 5년간 먼저 집중 지원해 성공 모델을 만든 뒤 다른 대학으로 단계적으로 확산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교육부는 15일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지역 거점국립대 9곳(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부산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을 서울대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으로 육성해 지역 인재 양성을 도모하는 균형발전 정책으로, 기존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명칭을 변경한 것이다.

이번 방안은 권역별 전략산업(성장엔진)에 필요한 인재를 지역에서 양성하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고, 대학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구축해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핵심은 거점국립대에 대한 패키지형 집중 투자다. 교육부는 올해 3개 거점국립대학을 선정해 ‘브랜드 단과대학’과 ‘인공지능(AI) 교육·연구 거점’을 동시에 지원하고, 대학당 약 1000억원 내의

의 예산을 추가 투입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거점국립대 3곳의 집중 지원 기간은 5년으로, 성공적 모델을 창출한 뒤 나머지 대학으로 단계적으로 확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거점국립대학을 우수 인재와 선도 기업(앵커 기업)이 모이는 교육·연구의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

를 위해 브랜드 단과대학 및 특성화 융합연구원에 총 1200억원, AI 교육·연구 거점에 300억원을 투입한다.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등록금과 생활비를 포함한 특별 장학 프로그램, 학부생 연구 참여 프로그램,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등을 통해 연간 1500명 내외를 지원하고, 기업·출연 연구원이 대학 교원을 겸직하는 방식으로 교육과 연구를 연계한다.

거점국립대는 지역 전체로 AI 역량을 확산하는 역할을 맡는다. 지역대학과 교육과정을 공유하고, 초·중·고 연계 교육과 지역 주민·재직자 대상 교육까지 확대해 지역인공지능 전환(AX)을 지원한다. 대학과 기업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융합연구를 통해 지역 산업 경쟁력도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3개 대학에 대한 집중 투자와 별도로 전체 거점국립대학 지원도 병행된다. 교육부는 올해 총 5448억원을 투입해 채용 조건형 계약학과 확대, 현장 프로젝트 기반 교육 강화, AI 기본교육 필수 이수제

도입 등을 추진한다. 또한 시도 단위 공유대학을 ‘5극 3특’ 초광역권으로 확대하고, 인프라 공유와 공동 연구, 창업 지원 등 대학 간 협력 범위를 넓힌다. 공유 대학 체계에는 총 1200억원이 지원된다.

교육부는 거점국립대 학생 1인당 교육비를 2030년까지 서울대의 약 70%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국립대학 혁신을 제도화하기 위한 ‘국립대학법’ 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상반기 중 3개 패키지 지원 대학 선정계획을 공고하고 대학별 실행 계획을 접수한 뒤, 산업통상자원부의 성장엔진 확정 이후 최종대학을 선정할 예정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인재 양성은 필수적인 과제”라며 “지방대학 육성을 통해 지역 인재가 국가 성장의 핵심 원동력이 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metro

광명시, 미래 일자리 사업 556억 투입

올해 일자리 1만6965개 창출 목표

광명시가 올해 일자리 1만 6965개 창출을 목표로 민생경제 회복과 고용 안정에 속도를 낸다.

시는 민선8기 비전인 ‘미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삶의 질 향상’ 실현을 위해 올해 총 123개 사업에 556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사업별로는 ▲직접 일자리 6462개 ▲직업능력개발훈련 2949건 ▲고용서비스·고용장려금 5656건 ▲창업지원 230건 ▲거버넌스 및 인프라 구축 1668개 등이다. 이와 함께 고용률 68%, 취업자 수 15만 4300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6만 9280명 달성을 목표로 설정했다.

올해 일자리 정책은 ▲수요 맞춤형 고용서비스 강화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미래산업 생태계 조

성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기반 일자리 창출 등 4대 전략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시는 전 생애주기 맞춤형 직업능력개발과 함께 청년·경력단절여성 고용 지원, 취약계층 맞춤형 일자리 확대를 추진한다. 아울러 광명·시흥테크노밸리와 신도시를 중심으로 미래산업 거점을 육성하고, 4차 산업 분야 전문 인력 양성에 힘쓸 계획이다.

특히 청년, 여성, 중장년 등 계층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과 청년 일자리 제공, 여성 직업교육훈련, 인생플러스센터를 통한 신중년 교육 및 취업 지원, 어르신·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사업 등을 통해 고용 사각지대를 줄이고 시민 체감도를 높일 방침이다.

/광명(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서울시,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 확대

예산 143억 확보... 전년 두배 수준
임신 1회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

서울시에 거주하는 35세 이상 임산부라면 임신 기간 동안 발생한 외래 진료 및 검사비를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고령 임신 증가에 따른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2024년 기준 서울 35세 이상 산모 비중은 44.31%로, 고위험 임신 비용 부담 완화 필요성은 커지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2024년 7월부터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을 전국 최초로 도입했으며, 첫째 신청 건수 1만3718건에서 지난해 2만5415건으로 증가했다.



서울시는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을 상시 운영한다. /서울시

시는 매년 증가하는 수요에 대비해 올해 143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이는 지난해 75억2000만원 대비 대폭 확대된 규모다.

사업은 임신 확인일부터 분만 전까지 발생한 외래 진료 및 검사에 대한 본인부담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임신 1회당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35세 이상 임산부로 분만 예정연도 기준 연령이 35세 이상이면 해당된다. 2026년 출산 예정자는 1991년생부터, 2027년 출산 예정자는 1992년생부터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항목은 외래 진찰료, 검사료, 주사료, 처치료 등으로 진료과와 관계없이 폭넓게 인정되며, 입원비, 약국 영수증, 제증명료 등 일부 항목은 제외된다. 임신 확인 이후 유산한 경우에도 당일 처치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 조영창 시민건강국장은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더욱 확대해 출산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오늘의 날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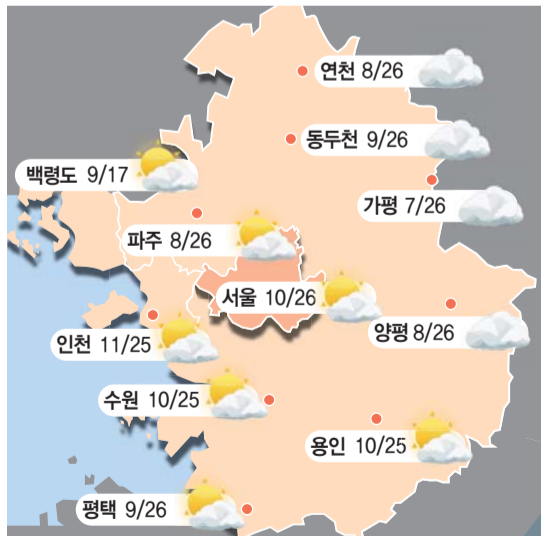
해돋이 / 05:56 | 해질 / 19:08

4월 16일 (木)
음력 : 2월 29일

수도권 날씨

10 ~ 26°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서울시, RISE 추가 공모... 260억 규모

내달 15일까지... ‘현장 실효성’ 초점

서울시가 대학의 인재와 기술을 산업 현장의 경제 성과로 있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추가 공모를 추진한다. RISE는 교육부가 대학 재정지원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 지역 맞춤형 인재 양성과 산업 연계를 유도하는 사업이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공모는

기존 서울형 RISE 사업을 기반으로, 대학의 혁신 자원이 ‘캠퍼스 안’에 머무르지 않고 산업 현장에서 즉시 활용될 수 있도록 ‘현장 실효성’을 한층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시는 ▲청년취업사관학교 대학+(신규, 35억원) ▲산학협력 생태계 활성화(확대, 185억원) ▲서울 RISE 10 챌린지(신규, 50억원) 등 3개의 핵심 단위과제 등 3개 사업을 추가 공모한다.

참여 희망 대학은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서울 RISE 센터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24일 서소문 1청사에서 열리는 사업설명회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 운영 방향을 안내받을 수 있다.

이수연 서울시 경제실장은 “서울리즈(RISE)를 대학과 산업 현장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혁신 생태계의 전환점으로 만들겠다”라며 “단순 지원을 넘어 대학의 잠재력이 서울의 성장 동력이 되는 상생 모델을 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메트로 한줄뉴스

- ▲ 민주공고, 美 추방하는 불법이민자 30여 명 첫 수용
- ▲ 트럼프 차남 에릭, 부친 中방문 동행 “개인 자격 참석”



- ▲ 월가 은행들, 중동 리스크에도 깜짝 실적 “美 소비 탄탄”
- ▲ 시진핑, 러 라브로프 접견... “합리적인 국제질서 구축” 강조

사진 뉴시스

- ▲ 트럼프 ‘예수 이미지’ 내렸지만... 공화당 비판속 교황 총돌 파장
- ▲ 美 코스트코 ‘8초 결제’ 도입했지만... 현장 직원은 “아수라장” 분통